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
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두발언(3.26)

- 축산물 가격이 아프리카 돼지열병(ASF)과
고병원성 AI 발생 등의 영향으로
전년 대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만,
 - 정부에서는 가축 전염병 확산이
물가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
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,
최근에는 가축전염병 확산이 둔화되고 있습니다.
- 최근 공정위 조사 결과,
돼지고기 납품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확인되었고
 - 계란의 경우도 생산자단체가 산지가격을 인위적으로
조정하여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
- 민생 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란과 돼지고기에서
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
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
- 정부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
관용없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.
 -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
금년부터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,

○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
관련 업계에 대한 지도·감독을 강화하는 등
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.

□ 또한, 축산농가,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
축산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

○ 계란 거래시 ‘표준거래계약서’ 작성을 제도화하고,
돼지 거래·정산가격 정보를 조사·공개하는 등
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
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
축산물 물가 관리 및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에
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
산업통상부 차관 모두발언(3.26)

-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2주일이 경과하는 내일 0시부터,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적용합니다.
 - 앞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처럼, 2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,934원, 경유 1,923원, 등유 1,530원으로 지정합니다.
 - 어민분들의 생업을 위한 유류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'선박용 경유'도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.
- 2차 최고가격은 1차 가격에 국제가격 상승률과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고, 국민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.
 -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, 최고가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, 휘발유는 약 200원,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금번 조정안은 중동전쟁으로 이어지는 고유가 부담을 정부와 국민, 그리고 기업이 함께 나눈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.
 - 최고가격 상향 조정으로 국민분들께서는 생활에 불편하시겠지만 기름 소비를 절약하고,
 - 정유사와 주유소는 최고가격을 준수해 가격인상 속도를 조절하며,
 - 정부는 유류세 인하 확대와 재정지원을 통해 민생부담을 완화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위기상황에서의 고통을 분담하게 합니다.

- 이번에 최고가격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주유소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.
- 1차 최고가격 지정시에 주유소 가격이 재고물량 소진 등을 이유로 점진적인 인하 속도를 보인만큼,
 - 2차 최고가격 지정 후에 급격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대로 ‘무관용 원칙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.
- 정부-시민단체-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전국 모든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점검하고,
 - 담합, 매점매석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.
- 이번 최고가격제를 통하여 우리 경제주체들이 경제공동체로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기를 기대합니다.
- 어려운 시기인만큼, 국민분들께서도 자발적인 차량 5부제 등에 동참해 다함께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
법무부 차관 모두발언(3.26)

- 법무부 차관입니다.
- 최근 중동 상황은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 - 특히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관리비는 삶의 기본적인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비용으로,
 - 불투명한 부과나 편법 인상은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.
- 이에 법무부는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 - 법무부는 작년 11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.
 - 이후 대통령께서 집합건물 전반의 관리비 부담이득 개선을 지시하심에 따라, 법무부는 전국 주거용 오피스텔 및 서울특별시 소규모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,
 - 관리주체의 관리 부실 내지 소홀로 인해 투명한 관리비 징수가 어려운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.
 - 이에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정비하는 동시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상반기 내 집합건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

- 법령 정비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어디에 거주하든지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,
 - 소유자 아닌 점유자도 건물 관리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되며, 관리 부실 집합건물에 대한 지자체장의 감독도 실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 - 집합건물의 관리비 문제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조속하게 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- 한편, 중동발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생활필수품 담합 등 국민의 기본생활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.
 - 법무부는 이번 사태 초기인 3월 초순경에,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는 일체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총력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였고,
 - 검찰에서 유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현재 엄정하게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.
- 법무부는 전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, 물가 안정과 민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▣